

## 신문 모니터

- 문서번호 부산총감연2020-0408-신문05
- 수 신 각 언론사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사회부 기자
- 발 신 부산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지부
- 제 목 본격 선거운동 시작하는데 부산일보 1·2위로 순위 매기고 국제신문 '이겼다' 표현했다
- 날 짜 2020년 4월 8일(수)

### 본격 선거운동 시작하는데 부산일보 1·2위로 순위 매기고 국제신문 '이겼다' 표현했다

부산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지부는 부산지역 신문(국제신문, 부산일보)과 지상파방송 메인뉴스(KBS 부산, 부산MBC, KNN 저녁종합뉴스)를 주요 대상으로 선거 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를 대상으로 3월 30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5일간 진행한 신문 모니터 5차 보고서이다.

분석기간	3월30일(월)부터 4월3일(금)까지
분석대상	국제신문, 부산일보
분석기사	제목은 물론 내용에서도 “선거”, “총선”, “지역구”, “지지율”, “유세” 등 선거와 관련된 단어가 한 번이라도 언급된 기사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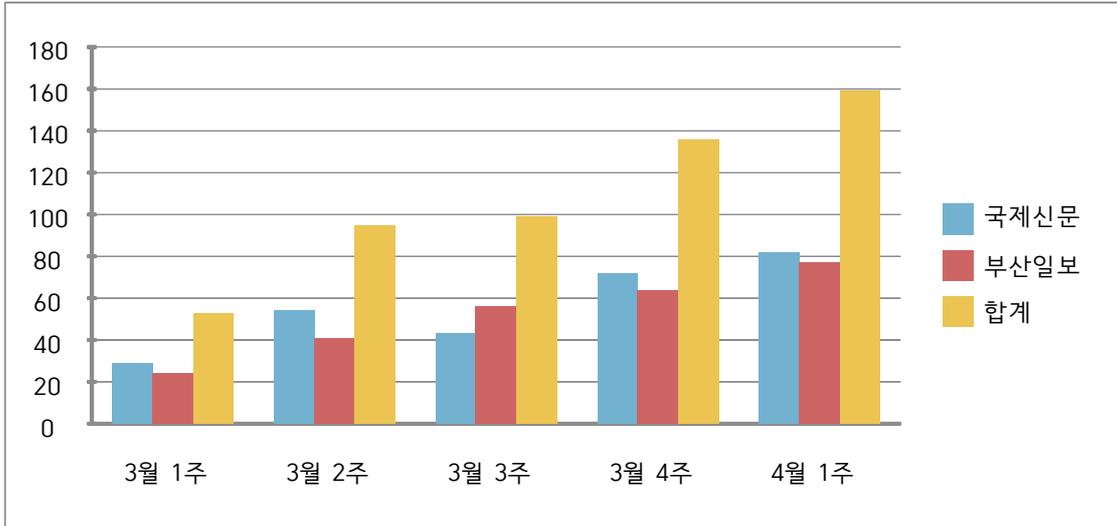
△ <표1> 부산지역 일간지 4·15 총선 관련 보도 양적 분석 개요

#### 선거 보도 증가세 뚜렷하지만 기획 기사는 여전히 2퍼센트 대에 머물러

총 보도 수 대비 선거 보도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이는 3월 넷째 주 보다 2.8%p 상승한 수치다. 3월 다섯째 주-4월 첫째 주(이하 4월 첫째 주) 선거 보도는 159건이다. 이 주에도 국제신문 82건, 부산일보 77건으로 미미하지만 국제신문에서 선거보도가 더 많았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보도 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보도유형은 한 달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스트레이트 기사가 선거 보도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스트레이트 다음으로 많은 보도유형은 사진기사로, 5.6%의 비중을 보였다. 기획 보도는 단 2.5%에 머물렀다. 스트레이트는 기사의 가장 기본 유형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면도 있으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기

획기사가 1건 내지 3건에 불과한 건 우려스럽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각각 3월 23일과 3월 16일, 1면을 통해 선거보도 기획을 실시하겠다고 알리기도 했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보 도 량	선거 보도 수	82	77	159
	총 보도 수	376	329	705
	총 보도 수 대비 비중	21.8%	23.4%	22.5%
	지난 주 대비	+ 1.8%	+ 4.1%	+ 2.8%
보 도 유 형	스트레이트	68	64	132
		82.9%	83.1%	83.0%
	기획, 연재, 특집	1	3	4
		1.2%	3.8%	2.5%
	인터뷰	0	2	1
		0.0%	2.5%	0.6%
	사설	3	3	6
		3.6%	3.8%	3.7%
	칼럼	4	3	7
		4.8%	3.8%	4.4%
사진	6	3	9	
	7.3%	3.8%	5.6%	
사실확인보도	1	0	1	
	1.2%	0.0%	0.6%	
기타	0	0	0	
	0.0%	0.0%	0.0%	

△ <표2> 매체별 4·15총선 관련 보도건수와 비중

### 1·2위로 순위 매긴 부산일보

#### 선거 결과인지, 여론조사 결과인지 분간 안 돼

선거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해 <2020총선보도제작준칙>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일 때에는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으로 보도한다. △선거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보도는 자제하며, 후보자 캠프와 선거전문가의 선거전

망과 판세 분석 기사는 최대한 신중하게 보도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4월 첫째 주 부산지역 신문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 간 순위를 매기거나, '승리했다', '이겼다'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부산일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에 의뢰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4.2\sim 4.4\%P$ 였다. 이는 최대 8.8%P까지의 격차 내에선 후보 간 우위를 판가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해당 결과는 3월 30일과 31일, 2,3,4면에 걸쳐 보도됐다.

헤드라인은 거대 양당 두 후보에 초점 맞춰 후보 간 격차를 '우세', '앞서', '따돌려' 등으로 표현하는 전형적인 경마식 보도 형태를 보였다. 기사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여론조사 결과를 문항 별로 나열한 형태였다.

선거기간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는 결과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추이를 보는 데 활용돼야 한다. 유권자들이 헤드라인만보고 결과를 단정 짓는 함정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함정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픽에도 있었다. 특히 부산일보는 3월 30일, 31일자 신문 2·3·4면 그래픽에서 후보자들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서열을 매겼다. 독자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의도는 좋지만, 여론조사 결과로 후보의 순위를 매기는 행위는 총선 보도준칙에 위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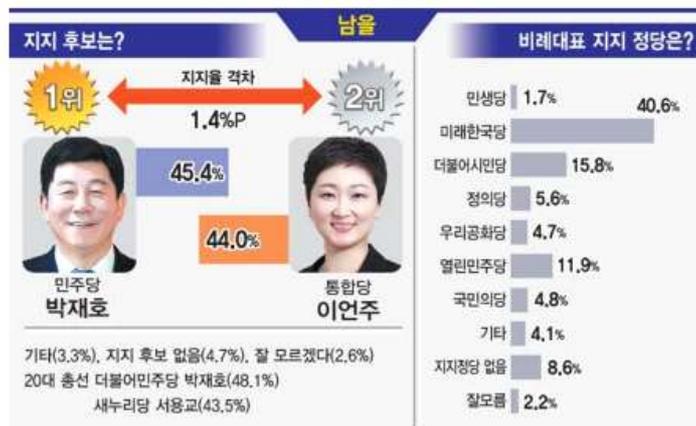
△ 부산일보, 3/30, 2-3면



△ 부산일보, 3/31, 2-3면

게다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 1위, 2위라 할 수 없음에도 그래픽으로 1위, 2위로 고정시킨 경우도 있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3장 8조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심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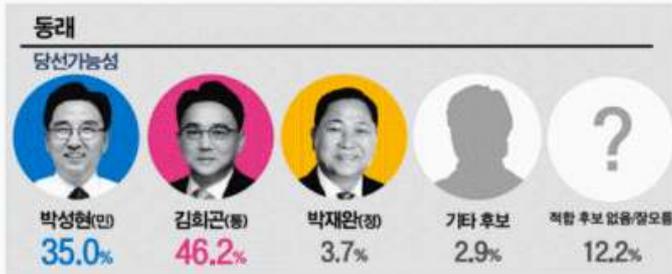
부산일보가 1·2위를 매긴 그래픽은 총 14곳의 지역구에 사용됐고 이중 9곳이 8.8%P 미만의 격차를 보였다. <박재호·이언주 오차범위 내 접전 '초격전지' 입증>(부산일보, 3/30, 3면)을 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4%P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순위를 매긴 그래픽 효과 때문에 접전 양상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 부산일보, 3/30, 3면, 오차범위 내 접전임에도 1,2위라 순위 매긴 그래픽

지난주 여론조사 보도를 크게 다룬 국제신문은 이번 주에도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몇 건의 보도를 실었다. 국제신문은 <온천동에선 與 박성현 우위 나머지 동은 김희곤이 강세>(3/30, 2면) 3번째 단락에서 후보들 간의 지지율 차가 0.5%P 차이 날 뿐인데 “이겼다”고 표현했다. 한 번의 여론조사결과만으로 특정 후보의 우세에 필요 이상의 확신을 부여하는 언어 표현은 쓰지 말아야한다.

# 온천동에선 與 박성현 우위 나머지 동은 김희곤이 강세



**부산 동래**  
 金 지지도·당선가능성 모두 1위  
 18~29세, 30~40대보다 보수화  
 “정권심판” 51% “국정안정” 40%

강세를 보였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 만 18세-29세 유권자는 오히려 3040보다 보수적이었다. 박 후보가 이 나이대 응답자에게 거둔 지지율은 38.1%다. 이는 그가 30대(47.1%)와 40대(43.0%)로부터 얻은 지지율보다 4.9-9% 낮은 수치다. 반면 김 후보는 50대(54.0%)와 60대 이상 응답자(53.6%)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받았다.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업무수행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18세-29세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50.9%로 부정 응답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또한 30대(53.2%)와 40대(55.8%)의 지지율보다는 떨어진다. ‘매우 잘하고 있다’며 적극 지지를 보인 응답 또한 28.6%에 그쳤다. 문 대통령에게 적극 지지를 보낸 30대 응답자는 44.2%, 40대 응답자는 42.1%로 나타난 것과 비교된다.

4·15 총선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서는 정권심판론(51.2%)이 국정안정론(39.9%)보다 우세했다. 정당 투표에서 선택할 단체로 꼽힌 정당은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42.3%)이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정당 더불어민주당(23.9%)과 민주당 계열 비례 정당인 열린민주당(9.2%)의 합보다 많았다.

신심법기자 mets@kookje.co.kr



부산 동래구는 3선미래통합당이진복의원의 불출마로 새 얼굴들이 유권자 앞에 나섰다. ‘투키대투키’의 대결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는 ‘진짜신인’은 자신이라고 말한다. 박 후보는 미래통합당 김희곤 후보를 이 의원의 분신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의원의 철학을 계승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의정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유권자들은 ‘참산’과 ‘계승’ 중 무엇을 택했을까. 국제신문의 의뢰로 풀리컴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43.4%)가 박 후보(34.4%)에 오차범위를 벗어난 우위를 보였다. ‘지지 후보와 상관 없이 누가 당선될 것이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도 김 후보(46.2%)가 박 후보(35.0%)에 11.2%포인트 앞섰다.

동네별로 볼 때 신축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온천동에서는 박 후보가 41.4%의 지지율을 기록해 39.9%의 응답을 받은 김 후보에 이겼다. 나머지 수인-복산-명륜동, 사직동, 안락-명장동에선 모두 김 후보가 승리했다. 특히 50대 및 60대 이상 유권자가 많은 안락동과 명장동에서 김 후보는 응답자 47.3%의 지지를 받아

△ 국제신문, 3/30, 2면

부산일보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유권자 지형에 관한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놨다. 이 가운데 몇 가지 분석은 여론조사 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PK 중도층 표심변화 뚜렷이 나타났다> (부산일보, 3/31, 4면)

<응답자의 38%가 지방선거때와는 투표정당 달라> (부산일보, 3/30, 4면)

부산일보는 여론조사에서 ‘4.15총선에서 투표하는 후보자의 정당과 지난 부산시장/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투표한 후보자의 정당이 같습니까?’는 질문이 지역 정가에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중·동부산 지역구 조사에서 응답자 48.3%(7개 지역 평균)는 ‘투표 정당이 같다’고 했지만, 38.0%는 ‘투표 정당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서부산, 경남 7개 지역 조사 결과에서도 ‘투표 정당이 다르다’는 응답은 36.7%달했다”라고 알렸다.

문제는 기사 말미에 이 결과를 “이전까지 진보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이 보수 쪽으로 상당히 이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해석한 데 있다. 기사는 2년 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짜슬이’를 이끌어낸 중도층의 표심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마련한 질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문지에서 응답자가 이전 선거에서 정확히 어떤 정당을 지지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번 선거에서 보수 정당을 투표한 유권자가 이전에 진보 정당을 지지했다고 꼬집어 말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 상당수 정당이 정당명을 바꾼 것을 감안하면, 설문조사가 의도대로 이뤄졌을 지도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정확히 같은 정당으로 인식할지 의문이라는 말이다. 이전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지지자가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에 투표하더라도 ‘투표 정당이 다르다’고 답할 가능성도 있다. 유권자가 질문을 의도에 맞게 해석했을지 의문인 동시에,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도 추정이 대부분이라 기사를 신뢰하기 힘들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측은 이번 조사를 두고 ‘이런 유형의 질문은 해본 적이 없다’고 반응해, 부산일보는 부산시 선관위에 의뢰해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애초에 질문 구성이 타당했는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경마성 보도	5	23	28
	6.0%	29.8%	17.6%
가십/이벤트 보도	6	1	7
	7.3%	1.2%	4.4%
일방중계 보도	3	1	4
	3.6%	1.2%	2.5%
양당/다방 단순보도	4	0	4
	4.8%	0.0%	2.5%
양대정당중심 보도	20	20	40
	24.3%	25.9%	25.1%
정치협오 보도	1	0	1
	1.2%	0.0%	0.6%
전투/경기 표현 보도	2	11	13
	2.4%	14.2%	8.1%
지역/연고주의 보도	0	6	6
	0.0%	7.7%	3.7%
익명보도	4	3	7
	4.87	3.8%	4.4%
따옴표 보도	2	1	3
	2.4%	1.2%	1.8%
오보	0	0	0
	0.0%	0.0%	0.0%

△ <표3> 매체별 4·15총선 관련 유해보도(\*중복집계)

### 같은 후보, 같은 지역구 놓고서 동정 보도 보여준 부산일보, 공약 보도 보여준 국제신문

4월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신문 지면에서도 후보 동정 보도가 등장했다. <‘상인과 춤추고’ “언니야 동생아”…판세만큼 유세장도 ‘후끈’>(부산일보, 4/3, 4면)은 “윤 후보와 입구에서 만난 한 상인은 엄지손가락을 돌려 올려 춤을 쳤다. 윤 후보도 함께 몸을 흔들었고…”, “주민들과 스킨십에서 윤 후보에게 밀리지 않는 김 후보 또한 상인들과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르며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라며 부산 해운대를 윤준호 후보와 김미애 후보의 유세 현장을 묘사했다. 현장감은 드러나지만, 이러한 동정보도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유익한 정보를 주고 싶은지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런 가벼운 동정보도는 SNS 등 다른 플랫폼을 활용해 전달해도 충분하다.

반면 국제신문 <센텀2 개발·동부산대 화두…“코로나 방역대책이 표심 좌우”>(4/3, 3면) 기사는 해당 지역구의 이슈와 그 이슈에 대한 지역구 유권자의 민심을 잘 담아낸 보도다. 기사가 함께 제시하고 있는 사진은 후보들의 선거운동 현장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후보의 동정이 아닌 지역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반여1동 이형준(35) 씨는 지역민심을 묻자 이곳 집값이 떨어 거라는 기대감은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상당수 주민이 센텀2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더 큰 효과를 기대한다”, “한연비(24) 씨는 특정 부지를 개발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식의 공약은 여러 차례 있었다. (중략) 오히려 개발에 따라 이 지역 주거 환경 생활수준의 격차 등 ‘보이지 않는 선’이 더 견고해 질 거라는 우려도 크다” 등, 지역 현안인 센텀2지구 개발을 둘러싼 유권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유권자의 목소리가 빠진 후보자 동정 보도는 민심을 그려내기보다, 유세 현장 그 자체만 묘사하는 가십성 보도가 되기 쉽다. 유권자의 입을 통해 지역 현안과 후보에게 바라는 점을 그려내길 기대한다.

## 센텀2 개발·동부산대 화두…“코로나 방역 대책이 표심 좌우”

### ■ 부산 해운대

윤준호·김미애 후보 박빙 대결  
센텀2 방향성에 기대반우려반  
반여동 주민 ‘코로나 스트레스’  
일부 갑질 우려 투표 표기 조정  
반송동 한 상인 대표 목소리 호소

부산 해운대를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의 재산이나, 미래통합당 김미애 후보의 도 다른 성공 신화를 놓고 한 번 승부가 갈라지는 곳이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볼 수 있듯 공신선거운동 이전부터 두 후보 간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2일 국제신문 취재진은 반송 반여동 유권자 30여명에게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000명 이상을 만난다. “반여1동 주민 이형준(35) 씨는 지역민심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이곳 아파트에 신혼부부들이 많지만 해당 아파트가 팔기



공신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미애 후보가 각각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과 반송동에서 유권자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준호 후보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000명 이상을 만난다. “반여1동 주민 이형준(35) 씨는 지역민심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이곳 아파트에 신혼부부들이 많지만 해당 아파트가 팔기

는 기대감을 잃었다.”면서 “현재만 현 정부는 상당수 주민이 센텀2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더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발 사업의 방향성이나 효과

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나왔다. 대략 35%는 “특정 부지를 개발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식의 공약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성공했다는 소식은 접한 적이 없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개발에 따라 지역 주거 환경, 생활 수준의 격차 등 ‘보이지 않는 선’이 더 견고해질 거라는 우려도 크다”고 표정었다.

반여동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고, 이에 따라 자가 격리자도 많았다. 이런 분위기가 맞에 이 지역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평가가 표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양평을 요구한 30대 학부모는 “7월이라는 때는 정부의 방역 대책을 평가하는 시점이다.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등산에 이어지는 주민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극에 달해 정부를 비판하는 지인도 많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있는 유권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반여동 3500세대 아파트 단지를 양분하는 한복판 도로의 상가. 점심 시간에 방문했지만 정연(아·54) 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테이블 8개 중 손님이 있는 곳은 단 1개였다. 정 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엔 아이와 함께 김밥 판매를 하던 가게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트 단지 자체가 크게 늘면서 방문객은 5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 국제신문, 4/3, 3면

## ‘상인과 촌추고’ “언니야, 동생아”… 판세만큼 유세장도 ‘후끈’

### ■ 초박빙 현장을 가다

#### 부산 해운대

윤준호·김미애, 반송권시장 유세  
윤, 아내·아들과 함께 지지 호소  
김, 상인들 어깨 추물러주며 격려

공신 선거운동 기간에 걸맞은 2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권 시장 유세장은 초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미애 후보가 동시에 유세를 나섰다. 이 지역의 (구 산양동) 여론조사(부산일보 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3월 25~26일 조사,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두 후보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정부 정책과 지역별 질문 등에서 모두 2~3%p의 내 차이를 보였다. 그만큼 유세 현장에서 유권자 열기가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가 2일 오전 해운대구 반송권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왼쪽). 비소현 시장, 미래통합당 김미애 후보 또한 해운대구 반송권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윤준호 후보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000명 이상을 만난다. “반여1동 주민 이형준(35) 씨는 지역민심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이곳 아파트에 신혼부부들이 많지만 해당 아파트가 팔기

시진 방문객들과 상인들에게 “편리하게 놓이게 다가가겠다. 반면 집에 서 있던 부친(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생인 윤 후보의 둘째 아들 민형(24) 씨는 “어제만 모습을 보이자마자 유권자들에게 부지런히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도 함께 몸을 흔들었고 이를 지켜보던 주변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윤 후보와 상인들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자와 만난 전모(73) 씨는 윤 후보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유권자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전 씨는 “당선 안 됐을 때도 시장에 주어질 것 같아 민원을 들고 해결하러 노력했다”며 “지난 보궐선거에서 처음 이곳을 때 유세를 시작한 김 후보는 일구에서부터

뜨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장에서는 윤 후보의 아내 김 후보가 만나 서로 격려하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윤 후보가 앞장서 함께 마중하며 윤 후보의 아내 전 씨가 김 후보에게 다가서서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도 “제가 오히려 영웅이다”며 인사를 나눴다.

△ 부산일보, 4/3, 4면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후보자 기본 정보	2	1	3
	2.7%	1.5%	2.2%
정책 공약	21	21	42
	29.1%	32.8%	30.8%
후보자 자질	15	21	36
	20.8%	32.8%	26.4%
공천 관련	15	19	34
	20.8%	29.6%	25.0%
선거 전략	33	22	55
	45.8%	34.3%	40.4%
선거 판세 여론조사	21	18	39
	29.1%	28.1%	28.6%
후보 동정	0	2	2
	0.0%	2.5%	1.2%
선거법 관련	1	0	1
	1.3%	0.0%	0.7%
시민 사회 동향	1	3	4
	1.3%	4.6%	2.9%
기타	2	2	4
	2.7%	3.1%	2.9%
합계	111	107	218

△ <표4> 매체별 4·15총선 관련 보도에서 보도 주제(\*중복집계)

## 역대 공약 이행여부 확인은 꼭 필요한데, 왜 하필 동남권 신공항만 주목했나

국제신문은 <단골 이슈 동남권 관문공항 이번 선거선 ‘잠잠’…피로감 탓?>(4/2, 2면)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이슈를 선거 의제로 끌어올릴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국제신문이 유권자가 놓친 이슈를 발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국제신문도 다른 지면과 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항공사의 도산 위기와 공항 이용객 급감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SOC예산을 줄여 긴급재난기금을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동남권 신공항이 이슈가 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과연 시기적절한지 의문이다.

기사 제목에서처럼 이 이슈가 ‘잠잠’해진 이유도 기사에서도 언급됐듯, “14년 가까이 끌여온 동남권 관문공항 논의에 대한 피로감”,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사는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피로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데 대한 혐오감 등을 해소하면서 이 이슈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도는 이슈 발굴이 아닌, 지역 이해관계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현역 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 따져보는 보도는 없는 가운데 유독 동남권 신공항만을 골라낸 점에서 더욱 그렇게 읽혔다.

# 단골 이슈 동남권 관문공항 이번 선거선 ‘잠잠’… 피로감 탓?

코로나로 김해공항 한산-약발 저하  
선거 때마다 ‘희망고문’ 냉소도 한몫  
부산 민주당 핵심공약에 명백한 유지  
부산 통합당은 공약에서 아예 제외  
전문가 “여야 초월에 관철시켜야”

부산 선거전에서 단골이던 ‘동남권 관문공항’ 공약이 이번 4·15총선에서는 사실상 실종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이 지난달 28일 핵심공약 발표를 하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추진을 집어넣어 생략한 유지했지만, 이는 누구 하나 눈길을 안 끌 정도로 존재감이 사라졌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핵심공약에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아예 빠져있다. 동남권 관문공항이 총선 경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선 전에 총리실 검토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여야 모두 동남권 관문공항 공약에 등을 돌린 이유는 뭘까.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이 사실상 중단된 데 더해 김해공항이 용역 수가 급감하는 현 상황에서는 동남권 관문공항 공약을 전진 배치시킬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힌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4년 가까이 끌어온 동남권 관문공항 논의에 대한 피로감도 한몫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 때마다 집권당의 선거를 위한 공약으로만 동남권 관문공항이 소비되면서 ‘희망고문’의 반

복이라는 인식도 팽배하다. 민주당의 동남권 관문공항 공약에 대해 “보다 시화할 고문하다”, “지난 총선 때 ‘광역(현상)’에 대한 사과도 없는 율령지”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국회의원 5명만 뽑아준다면 신공항 직장을 반드시 아무것도”고 약속했고, 실제 부산에서 5명이 당선됐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병수 통합당 부산 선취위원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이) 아직 피안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재검증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부산 김해신공항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신공항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차도 신공항 건설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통합당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후보의 주장도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2014년 재방안기때 기차도 신공항 성사에 시장직을 가는 등 정치적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심본 활용했기 때문이다.

과거 역대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이견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선거 공약의 유효리를 따지자면 여야를 초월에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 국제신문, 4/2, 2면

## ‘기타’가 된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들

부산 총선미디어감시연대지부는 여러 차례 언론이 거대 양당 위주의 보도에 치우쳤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주 보도에도 그런 경향은 고쳐지지 않았다. <부산 연제 김해영·이주환 접전 - 동래 박성현 < 김희곤 > (국제신문, 3/30일, 1면) 보도를 보면, 기사 내용과 달리 그래픽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만 소개됐다. <당선 가능성 오차범위접전 청년표가 캐스팅 보트 될 듯> (국제신문, 3/30, 2면), <온천동에선 여 박성현 우위 나머지 동은 김희곤이 강세> (국제신문, 3/30, 2면) 기사 그래픽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온 후보들은 ‘기타 후보’라는 명칭으로 묶여 소개됐다.

국제신문은 여론조사 결과를 나타낸 그래픽에서 여전히 거대 양당만을 주목할 수 있게 그려냈다. 코로나19로 조용한 유세가 대세가 되면서 인지도가 낮은 군소정당 소속의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도 거대 양당을 대변하는 스피커를 자처하면서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목소리는 내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유세기간 동안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을 소개하는 보도에 지면이 할애되기를 바란다.



△ 국제신문, 3/30, 1면 그래픽



△ 국제신문, 3/30, 2면, 그래픽

## 범죄, 재산 그리고 긴 투표 용지 정치혐오 부추기는 기사 한 지면에 몽땅 등장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보도가 눈에 띄었다. 언론이 코로나19로 낮아질 투표율을 끌어올리려는 낡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보도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국제신문의 3월 30일자 3면 구성이 대표적이다. <음주운전에 살인까지…부산 3명 중 1명은 전과자>(3/30, 3면), <정근재산 500억, 박상근 부채 19억…30억 넘는 10명중 9명 통합당>(3/30, 3면), <비례 투표용지 48cm 100% 손 개표한다>(3/30, 3면) 보도는 정치와 정치인의 부정적인 면모를 필요 이상으로 일반화했다.

실제 기사를 보면,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음주운전이나 살인만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학생운동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과 음주운전, 살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기사는 모든 전과를 같은 비중을 두고 다뤄, 결국 정치인 '3명 중 1명은 전과자'라는 지나치게 일반화된 메시지를 생산했다. 적어도 음주운전과 살인 전과를 가진 후보가 어떻게 공천을 통과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싣고, 이런 후보들은 더 이상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모니터 기간 내 지역 신문은 비례위성정당 논란에만 집중할 뿐 바뀐 선거법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례 투표용지 48cm 100% 손 개표한다> 기사에선 ‘50cm에 육박’, ‘위성·군소정당의 난립’, ‘유권자 혼란’이라는 표현으로 정치적 냉소주의를 유발했다.



△ 국제신문, 3/30, 3면

부산일보는 <‘프레임’을 씌워라 총선 ‘메시지’ 전쟁>(4/1, 8면)에서 두 거대 양당의 선거 전략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메시지 공방만을 다뤘다. ‘구태’ ‘꼰대’ ‘매표정책’등 서로를 비방하는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기에 앞서 언론이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 선거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했다.

### 후보자 발언·공약 검증한 이 주의 ★좋아요★ 기사

4월 첫째 주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선 주목할 만한 좋은 보도가 있었다. <[진실탐지기] 재난 지원금 당장 지급 가능?...규모 커 불가>(국제신문, 4/1, 6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화두가 된 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팩트체킹해 유권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해당 기사는 정부가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서병수 후보의 SNS발언을 팩트체크했다. 기사는 “세출 경정으로 포퓰리즘 사업만 구조조정하고 그 예산을 재해 대책 재원으로 전용하고 이용, 이체하면 추경하지 않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하겠다는 10조원이 아니라 100조원도 당장 만들 수 있다”란 서 후보의 주장에 대해, “‘10조’ 규모의 예산을 전·이용, 이체한 경우가 드물다”며, 국회 예결위 관계자의 목소리를 실어 “10조 규모 재원은 추경으로 마련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또 예산의 전·이용, 이체 조건이 까다로워, 서 후보의 주장처럼 다른 사업을 구조조정해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보도는 유권자에게 유익한 보도인 만큼, 지면에서 더 눈에 띄도록 배치하고, 어려운 용어는 더 친절하게 설명해 유권자가 기사를 더 쉽게 접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 재난지원금 당장 지급 가능?... 규모 커 불가

### 진실탐지기

**서병수 "재원 조정 땀 가능" 주장  
예결위 "10조 달해 현실성 없어"  
정부, 추경 등 고려 5월 중 목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당장 줄 수 있는데 왜 5월까지 질질 끌어댈까."

코로나19가 4·15총선을 뒤덮은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우선 정부가 목표로 한 시기는 '5월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기획재정부의 추경안 편성, 국회 심의·통과 등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논란은 미래통합당 서병수(부산진갑) 후보가 불 지폈다. 서 후보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출경정으로

포플리즘 사업만 구조조정하고, 그 예산을 재해대책 재원으로 전용하고 이용이 체하면 추경하지 않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하겠다는 10조 원이 아니라 100조 원도 당장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국가재정법 46조, 47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이용, 이체가 가능하단 얘기다. 서 후보 말대로 당장 수십조, 수백조 원을 만들어 지급할 수 있을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서 후보의 주장대로 막대한 재원을 당장 만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규모가 문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조' 규모의 예산을 전·이용, 이체한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10조 규모 재원은 추경으로 마

련하는 것이 맞다"며 "전·이용, 이체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에 너무 큰 규모"라고 했다.

예산의 전·이용, 이체가 까다롭다는 것도 이유다. 전용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예산 집행을 변경할 수 있다. 즉 '복지'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재난' 사업에 쓸 수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인건비는 전용 제외 대상이다. 복지사업에 편성된 인건비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인건비로 바꿔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예산의 '이용·이체'에 승부를 걸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방재정법 47조에 따르면 예산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만큼 전용보다 제한적이다. 물론 서 후보의 주장처럼 '시급한 재해대책'이 예외조항으로 명시됐지만 10조 원을 총당할 만큼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해정기자 call@kookje.co.kr

△ 국제신문, 4/1, 6면

<또 쏟아지는 '도시철도 공약'> (부산일보, 4/2, 3면)은 총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도시철도 유치 공약의 현실 가능성 검증했다. 해당 기사는 이번 총선에서도 도시철도 유치를 공약으로 내 건 사례를 알려주고 이의 현실가능성을 검증했다. 기사에 따르면 부산시가 2017년 6월 수립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1순위인 하단~녹산선조차 경제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통과가 미뤄졌다. 다른 도시철도 사업들 역시 심사가 보류되거나, 시급성과 경제성이 낮아 후순위에 밀려있다. 기사 말미에는 실제로 "지난 총선 때 나온 도시철도 유치 공약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할 때 참고할만한 정보를 주는 보도가 더 많이 나오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읍 윤준호, 기장 최택을 후보가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선 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선언했다. 후보 측 제공

## 또 쏟아지는 ‘도시철도 공약’

초읍·송도·정관·기장선 공약 줄이어  
실행성 낮은 데다 지난 총선 이행률 '0'

총선 때마다 등장하던 '도시철도 유치' 공약이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도시철도를 유치할 경우 교통 개선과 지역 발전 효과는 물론 아파트 등 부동산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어보다 좋은 공약이 없다. 도시철도 유치 공약은 대부분 부산시의 추진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어 실현이 쉽지 않다.

부산 부산진갑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초읍선(사직운동장~어린아데공원-부산시민공원-서면)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초읍동과 연지동 일대에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동동원 더파크와 부산어린아데공원, 부산시민공원이 있어 도시철도 이용 수요가 증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주민 반올도 뜨겁다.

사하읍에서는 민주당 이상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조경태 후보가 송도선(자갈치역-장림삼거리) 유치를 나란히 공약했다. 조 후보가 당적을 바꾸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4선을 하며 송송장구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지역으로 삼는 다대선의 유치와 완공의 효과를 특별히 보다는 게 중론이다.

기장에서는 민주당 최택을 후보와 무소속 김한선 후보가 정관선(좌현역-월평리)과 기장선(안평-임광신도시), 통합당 정동만 후보가 정관선·기장선·동부산선(장산역-송정-오시리아관광단지) 유치를 약속했다. 기장군은 오시리아관광단지 외 '외만섬' 정관신도시 등지에서 교통 수요가 커지고 있어 도시철도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운대갑 민주당 유영민 후보도 동부산선 유치를 약속했다.

공동 공약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해운대읍 윤준호 후보와 기장 최택을 후보가 기장선 조기

유치를, 통합당 해운대갑 하태경 후보와 기장 정동만 후보가 동부산선 추진을 공동 공약으로 채택했다.

부산시가 2017년 6월 수립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정관선은 3순위, 송도선은 4순위, 기장선은 5순위다. 부산시는 이 계획의 우선 순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순위인 하단-녹산선은 2018년 4월 예비 대상사업에 선정됐지만, 경제성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현재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감사선 역시 예비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지만, 간해공항 개발 방향이 확정된 이후로 심사가 보류됐고, 함께 신청했던 3순위 정관선은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8년 6월 최종 탈락했다. 동부산선은 계획 수립 당시 경제성이 낮아 장기 검토노선으로 관리 중이다. 공약으로 제시된 다른 도시철도들도 후순위에 밀려 있어 유치가 쉽지 않다.

지난 총선 때 나온 도시철도 유치 공약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기장 통합당 윤상직 의원은 정관선과 기장선 유치를 약속했고, 사하읍 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총선 때도 송도선 유치를 공약했다. 해운대읍 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반송-센텀 트램을 공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보들은 2017년에 수립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재평가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우선 순위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예비 대상사업 선정 시 경제성과 함께 보는 종합평가에서 균형발전, 공공성의 가중치를 높여 점수를 높이는 쪽으로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정치적으로 풀어낸 여지가 충분하다고 공언하고 있다. 부산시는 10년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5년 뒤 경제성 등을 재평가해 수정·보완(재정비)한다. 시는 초읍선을 새롭게 검토하고, 기존 구축계획 내 노선도 재평가해 이르르면 오는 6월께 재정비된 구축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대성 기자 nmaker@

△ 부산일보, 4/2, 3면